

| 사회적 대화 현장 |

# 첫 발 댄 창원형 일자리 연대기금 꾸준한 사회적 대화로 실현한다

## 청년이 가고 싶은 중소기업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 문제 해결로 다시 경제 일으킨다

박완순 <참여와혁신> 취재기자

창원을 둘러봤다. 여타 도시들과 다른 점이라면 구획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관공서, 사무용 건물, 주거지 등이 나뉘어 각자 몰려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시청에서 출발해 차로 10분 정도 이동하면 나오는 공단이다. 창원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공장들이 공단을 형성해 큰 부지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로를 지나도, 지나도 제조 공장들이 보였다. 우리가 알고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여 있었다. 조금은 삭막해보이지만 창원을 먹여 살리는 핵심적인 공간이다. 창원을 먹여 살리던 제조 공장들이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창원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손으로 셀 수 없이 많았던 공단 안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창원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에 나섰다. 노동계를 대표해 김은겸 한국노총 경상남도본부 총무기획본부장을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봤다.

### 심상치 않은 창원 경제

창원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공업 도시이다. 창원 지역 총부가가치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다. 2000년대 이전에 비해 그 비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창원 경제의 큰 축을 맡고 있다. 이 말은 창원 공단이 흔들리면 창원 경제도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에 돌고 있는 제조업 위기를 창원도 피해갈 수 없었다. 창원 제조업 부가가치는 2011년 31조 2,928억 원에서 2104년 29조 562억 원으로 계속 하락했다. 2015년에는 30조 3,986억 원으로 상승했지만 2011년과 비교하면 회복했다고 볼 수는 없다. 창원의 주요 대기업인 STX조선해양, GM대우 창원공장, 두산중공업 등의 불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 주요 대기업 불황은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으로까지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경제 여건 변화는 일자리 문제로 귀결된다. 기존 일자리의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진다.

### 일자리 문제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문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청년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 문제다. 지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기에 당연한 결과다. 일자리의 질적, 양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그나마 가고 싶은 일자리가 있어도 임금, 복지 수준이 열악한 실정이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속도가 정체되면 공동체의 미래 또한 불투명해진다. 노동시장 밖에 존재하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공동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출은 늘기 때문이다. 긍정적 지출도

있겠지만, 이것은 부정적 지출일 확률이 높다. 투자의 개념보다 부담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이다.

문제적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지만 답은 간단하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문제는 해결된다. 사회적 재분배의 긍정적 역할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공동체가 청년들이 갈 일자리에 투자 개념의 긍정적 지출을 도모함으로써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간단한 답을 작동하게 하는 방법과 단계는 까다롭고 복잡해서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이다. 왜 하필 청년의 일자리에 투자해야 하고, 투자 방식은 어떠해야 하며,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해당 공동체의 성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창원 지역 경제의 이해관계자들은 사회적 대화를 선택했다. 창원 노사정은 창원형 일자리 연대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 창원형 일자리 연대기금, 핵심은 연대다

국내·외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국면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힘을 합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연대기금을 조성했다. 외국의 유사한 사례로는 캐나다 퀘벡 노동연대기금을 들 수 있다. 캐나다 퀘벡 지역의 높은 실업률, 중소기업 위기 등 경기 침체에 맞서 노동연대기금을 조성하기로 지역 경제 주체들이 나선 결과물이다. 국내에서는 IMF 당시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현재 함께 일하는 재단으로 바뀌어 400억 원 규모의 연대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모인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출연한 공공상생연대기금도 마찬가지다.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 철회에 따라 1,600억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공익사업에 쓰기로 뜻을 모았다.

창원 노사정은 이러한 연대의 가치에 주목했다. 창원 노사정도 사회적 가치 창출, 나눔의 문화, 공동체 번영 등을 담보하는 연대기금을 경제 위기 해결 방식으로 택한 것이다. 세 주체 중에서도 노동계가 발 벗고 나섰다. 창원 지역 노동계는 일자리 문제를 노동의 문제로 바라보고 당사자 해결의 원칙을 세웠다.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일부 금액을 기부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경영계의 동참을 설득할 기제로도 활용하기로 했다.

## 연대의 실현은 사회적 대화의 실현으로

창원 노사정은 노동자 중심의 창원형 일자리 연대기금 조성 목표를 두고 꾸준히 사회적 대화를 해나가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창원형 일자리 연대기금에 대한 연구 및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세부적인 연대기금 조성 이행 방안을 세웠다. 현재는 노동계와 창원시 간의 노정 대화가 활발하다. 창원 경총과 창원 상공회의소는 4차 회의부터 참여하기로 했다. 노정 간의 대화에서 해결책이 구체화되니 지역 경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계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첫 발을 뗀 창원형 일자리 연대기금의 두 번째 걸음은 무엇일까. 2020년 새해 초에 노사정이 모두 모여 사회적 대화를 하고 적어도 5개 이상의 기업의 기금 출연에 대한 노사 합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 2020년 상반기까지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기금 적립과 사업 운영을 실행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창원형 일자리 연대기금의 운영 방향은 뚜렷하다.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고 따뜻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창원 노사정이 말하는 따뜻한 일자리는 비정규직,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작업장 혁신 등의 경영지원을 통해 창원 지역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고용 창출 시 연대기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활력도 제고하기로 했다. 따뜻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유기적인 방법들을 사회적 대화로 조직 중인 것이다. 아직 첫 발을 뗀 것이지만 꽤나 구체적인 방안까지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대화라는 노사정의 꾸준한 협의가 있어 가능했다.